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4636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이원배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박순호, 김명현, 박용준, 함미정, 최미자, 정홍근, 정능호, 김동성, 김태민, 신진미, 송용석, 최혜연, 오세길, 김세원, 정인화, 최병순, 양유환(19인)

1. 주 문

○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신호위반·과속·인도 통행 등 법규 위반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음

○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무인단속장비로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전경찰청장

4. 건의안: 별첨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촉구 건의안

이륜자동차는 기동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동과 생활 물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배달과 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일상화된 지금, 안전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는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구조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작은 사고도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인도 통행 등 법규 위반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1만 4,129건, 사망자는 388명에 달한다. 특히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2.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약 2.1배, 승용차 사고의 약 3.1배에 달해 치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이륜자동차 사고 실태 또한 우려스럽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총 2,558건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40명에 이른다.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한 해에만 432건의 사고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교통안전 문제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과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인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기존의 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된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어렵다.

반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후면 번호판을 촬영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과 단속 지점 통과 후 다시 가속하는 '캥거루 운전'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과 단속 효과에 주목해 많은 지자체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전국 운영 대수는 2023년 31대에서 2026년 8월 기준 1,341대로 크게 증가했다. 특·광역시의 경우 부산 148대, 서울 137대, 대구 101대, 인천 62대, 울산 30대 등이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대전은 15대에 그쳤다.

이후 대전의 운영 대수는 17대로 늘었으나, 현재의 운영 규모만으로는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상시 단속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의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륜자동차 사고 및 법규 위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연차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사고 다발지역과 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지역,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단속 실적과 사고 감소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설치 지역을 적극 확대하라.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